

여야, 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발언 난타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공산당 신문 언론 아냐" 인터뷰 논란 민주 "언론 장악 선전포고" 지명 철회 요구...국힘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 등을 겨냥해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아권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렸다"며 "공산당"이라는 표현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지금 어는 시대인데 공산당 타령인가"라며 "(공산당 언론이) 어느 매체인지 분명하게 짚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실상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방송을 공산당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정부의 판단에 따라 언론을 공산당으로 규정하고 이를 때려잡겠다는 극우적 줄 세우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언론을 장악하려 한 이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후보자가 '방송사의 좌편향 선거보도 견제 활동'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해당 문건이 진실한 문서인지 정보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김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2017년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 문건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MBC 장악을 지시한 게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분이 (현 대통령인) 윤석열 서울지검장"이라며 "국정원을 시켜 방송 장악을 지휘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한다니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를 목표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아권의 '방송 장악' 비판에는 정치 공세로 일축하면서 "민주당이 야말로 방송 장악 전문가"라고 거듭 역공을 펼쳤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홍석준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 문건에 대해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이런 문건이 문제가 되려면 문재인 정부 때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을 쫓아내다든지, 또 종편 승인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사를 퇴출시키는 시도를 한다든지 등 후속 실행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며 "이 문건에 대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공세"라고 강조했다.

언론인 출신 인사들도 전면이 나섰다. 당 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공적 성격이 짙은 방송 보도의 정상화에 가장 역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의 공세에는 "자기들이 한 것을 남도 할 것이라는, 이걸 '제발 저러다'고 하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전날 출근길 발언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자 발언에 대해 '언론은 장악될 수 없다' '언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이것은 맞는 이야기"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은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은 "민주당, 특정 세대 상처 주는 발언 안하겠다"

최고위 회의...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논란 진화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정하거나 특정 세대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자신의)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

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할 것"이라며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파문이 당 안팎으로 확산하자 지도부가 나서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 때와 똑같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충북지사 청주시장, 충북부지사, 청주부시

장을 문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송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충북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전날 '공산당의 신문·방송을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두고 "후보자 신분 첫날부터 독특한 언론관과 언론 장악 속내를 드러냈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 장악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로 들렸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송영길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 비겁"

"檢, 구속이 목적인 인간사냥" 입장문...내일 영장심사

2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앞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국회 판단과 불체포특권을 무시하기 위해 영장 청구일을 택했다는 점에서 비겁하다"고 반박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체포영장을 회의를 피해 재청구한 경우가 과연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제 기억에는 전례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도 이렇게 비겁하게는 수사 안 한다"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독재정권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실제적 진

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인신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폭압적인 청구이자 인간 사냥"이라며 "수사기관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그 자체를 성과로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다섯 달 동안 송영길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비겁하게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쳐나고 주장하는데 애만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해 영장을 청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달 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알박기 텐트 철거'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김승남 의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일 캠프하기 좋은 자리를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수욕장 관리권이 해수욕장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는 '알박기 텐트'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

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앞서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과 동일하게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알박기 텐트'를 관리권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현대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